

#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The Determinants of Tax Evasion of Korean Taxpayers

전 응 수 \*

이 경 일 \*\*

| 目 次              |          |
|------------------|----------|
| I. 서 론           | IV. 실증분석 |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V. 결 론   |
| III.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          |

## I. 서 론

납세자에 있어서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는 개인에서 국가로의 강제적인 이전이므로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이로 인해 지하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숨은 자산은 국가의 정책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징수가 대부분 신고납세 방식으로 되어있어 정부부과 방식보다 조세회피가 용이하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수입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서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

\*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세무사

론적으로 고찰하고, 납세자의 성향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부의 조세 정책 등에 고려해야할 요소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 1. 조세회피의 개념 및 유형

#### 1) 조세회피의 개념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납부하여야할 조세채무로부터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① 절세행위 : 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법이 인정하는 절세는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 절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② 조세회피행위 : 탈세와 달리 거래를 은폐 또는 위장하여 소득을 계산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사실에 근거 하고 있다는 것으로 행위 자체는 민사법상 위법이 아니며 사실에 반하지도 않지만 세법에 있어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 조세회피를 금해야 한다. 납세자의 절세권 행사로 인한 조세회피는 공평과세 원칙을 위배하므로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며 과세당국은 이를 위해 조세절약의 범위를 좁히거나 조세절약의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세회피로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조세포탈행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위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소득 재분배와 자원분배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행위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규명하여 조세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조세회피의 유형

조세회피 방법은 상당히 많으므로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조세

회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적인 조세회피 이므로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세무자료와 세무정보의 미제출 :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세무자료 등의 불성실제출은 조세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으므로 세무자료 등의 성실제출은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2) 소득항목의 허위보고 : 납세자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탈하기 위해 소득의 항목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 (3) 회계처리의 조작 : 이중장부 또는 이중 재무제표의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 등 다양한 조작을 들 수 있다.
- (4) 재산(재화)의 은닉 : 재산에 대한 법적 지배권을 면제자나 저소득자에게 형식상 이전하는 행위, 현금, 귀금속, 무기명 증권, 예술품 등의 형태로 상속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5) 조세감면 혜택의 남용 : 특정산업에서 주어지거나 특정국가에서 제공되는 조세감면혜택을 남용하는 경우로 현행 세법에서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전가격 세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하고 있다.
- (6) 납세자의 해외도피 : 혼한 조세회피의 한 방법으로 각국의 세법의 복잡성과 허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 2.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 연구

### 1)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적 연구

1970년대에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시도 되었으며 Allingham과 Sandmo(1982), Yitzhaki(1984) 등은 세율, 적발확률, 소득 수준 및 벌금율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납세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면이 있다.

#### (1) Allingham과 Sandmo의 분석 모형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으로서 납세자가 고의적인 과소 신고에 의하여 조세회피를 할 것 인가하는 의사결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율과 신고소득의 관계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으며 적발확률과 벌금율의 증가는 신고소득의 수준을 증가 시키고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Srivasan의 분석 모형

조세회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Allingham과 Sandmo의 기대효용극대화 모형과 비슷한 기대 소득 극대화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납세자는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담할 세액과 벌금을 납부한 후의 기대소득을 극대화 시키는 의사결정을 한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 Yitzhaki(1984)의 분석 모형

Allingham과 Sandmo의 모형을 보충한 것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세법처럼 벌금이 조세포탈액에 부과된다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상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납세자가 절대적 위험 회피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세율의 증가는 조세포탈 감소를 초래하며 이 경우 대체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4) Christiansen(1980)의 분석 모형

낮은 적발확률 하에서의 무거운 벌금의 경우는 높은 적발확률 하에서의 낮은 벌금의 경우보다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Yitzhaki(1984)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1) Song과 Yarbrough의 연구

독신자나 월세 입주자에 비해 기혼자나 자가주택 소유자들의 납세 윤리가 높음, 소득 및 교육수준과 납세윤리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세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납세 이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 Lewise의 연구

대상으로 한 200명의 납세자들은 대규모 탈세에 찬성하지 않으며 이를 가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소규모 탈세에는 불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Spicer 와 Lundstedt의 연구

개인의 탈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도시 두 곳의 130개 중상위 항목을 토대로 확실성과 처벌의 엄격성은 잠재적인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단념 시키는가, 정부융역과 세금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은 납세자들의 탈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개인 등은 탈세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탈세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받았는지 3가지 가설로 연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처벌 확률만이 조세 저항 회귀등식에

서 유의적이었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조세저항이 적고 세무조사 경험을 가졌던 개인이 소득세에 더 저항적이며 탈세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다.

#### (4) Friendland, Maital 과 Rutenberg(1978)의 연구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세율과 같은 요소의 탈세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평균 25세의 나이를 가진 심리학전공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이 과소신고 된 횟수, 과소 신고가 발생한 달 동안 보고되지 않은 평균소득 부분, 신고 된 소득의 전체 부분에 대하여 10개월의 4개의 라운드에 대하여 게임을 실시한 결과 탈세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5) Spicer와 Baker(1980)의 연구

조세 체계에서 인식된 불공평성과 탈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로서 Colorado대학의 57명을 선정 10개월간 게임 실시하였는데 앞의 연구와의 차이는 세율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느끼는 사람, 사실을 아는 사람, 적게 세금을 납부한다고 느끼는 사람 순으로 탈세를 하였다.

#### (6) Witte와 Woodbury(1985)의 연구

납세이행에 대한 제재 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연구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 된 1969년 귀속 세금 신고서 자료로 이용하였다. 인구 통계적 변수, 국세청에 대한 인식, 처벌의 엄격성과 확률의 척도, 세 차감 후 소득 등의 다수의 독립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높은 세무조사 확률은 낮은 소득의 비영업 납세자들을 제외하고는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형사상의 사기에 대한 엄격성은 이행을 증가, 발각의 염려는 이행을 증가 시켰다. 또한 소득 효과는 복합적이고 이행률은 소득에 따라 매년 일정 수준의 소득까지 소득에 따라 증가, 노동소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납세자가 조세 규칙이 더 많이 동의하며, 나이가 적은 사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실업자들의 조세 규칙에 대한 동의가 적었다.

#### (7) 전태영(1980)의 연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세회피 행위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반응, 조세회피 규제 벌칙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결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갖으며, 소득 세율이 높은 상황의 납세자는 소득세율이 낮은 상황의 납세자에 비하여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이고, 정부 신뢰도가 높을 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유시영(19920의 연구

소득수준,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 공정성, 동거집단의 조세회피정도, 조세윤리, 연령, 성 등이 우리나라 소득세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는 것으로 실험연구를 이용했으며 결과는 누진세율은 조세회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세율과 조세회피 행동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 적발확률을 높이면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은 감소, 가산세율의 증가는 조세회피 행동의 감소를 초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있어서 적발확률과 가산세율의 상대적 중요성은 적발확률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선행연구의 요약과 본 연구의 차이점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행 연구에서 기존의 납세풍토, 과세의 공정성, 재정 불공평성,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조세 부담감, 납세 윤리,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영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업종별 분석이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더하여 파악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1) 납세 윤리에 따른 연구가설

도덕수준이 높은 납세자까지도 조세회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납세윤리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윤리가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설 1 : 납세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낮을 것이다.

## 2) 납세 풍토의 연구가설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도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나 동료 집단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다 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다.

가설 2 : 동일 수준의 동료집단이 조세회피가 많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높을 것이다.

## 3) 과세의 공정성 연구가설

과세의 공정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조세회피를 하는 이유가 조세 체계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주장하고 있지만 Spicer와 Baker(1980)는 과세의 불공정과 조세회 피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다.

가설 3 :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높을 것이다.

## 4) 재정지출의 불공정성 연구가설

조세란 개인의 재산이 국가로 강제 이전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의 혜택이 불공정 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조세를 회피하고 하는 욕구가 증가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다.

가설 4 :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높을 것이다.

## 5)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 연구가설

정부의 신뢰도에 따라 정부 제재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전태영 (1980), 유지영(1992)의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비율과 조세 회피율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설 5 :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의 제재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을 것이다.

## 6) 조세부담감 연구가설

기존의 연구는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Yitzhaki (1974), Clotfelter(1983)등은 조세부담감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llingham과 Sandmo(1972)의 연구에서는 벌금이 비신고 소득에 부과 된다고 가정한다면 벌금률이 조세회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6 : 조세의 부담감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높을 것이다.

## 7) 수출기업 등 업종에 대한 가설

수출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며 내수기업에 비하여 매출이 비교적 정확히 드러나므로 조세회피의 요인이 적다고 추정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7 : 수출하는 기업은 내수판매하는 기업보다 조세회피 성향은 낮을 것이다.

## 2. 변수의 설정

###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 자영사업자의 조세회피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 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설문조사에 따른 간접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지에 의해 측정된 조세회피성향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 2) 독립 변수

독립변수로는 납세율리, 납세풍토, 과세의 공평성, 제정지출의 불공정성, 조세회피에 대한 정부의 제재수준, 조세부담감, 업종 등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변수는 조세회피의 성향으로써 전표누락, 사적비용의 계상, 무자료 거래, 가공경비 계상, 인건비 과대계상,

재고자산의 과소계상, 매출 과소계상, 조세 피난처, 수출가격 조작 등 9개 항목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였다.

### 3.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항목, 종속변수 항목, 독립변수 항목 등 3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인고통계학적 항목에는 업종, 연령, 성별, 매출액, 업태, 자산총액으로 구성되고, 종속변수 항목은 전표누락, 사적비용의 계상, 무자료 거래, 가정경비 계상, 인건비 과대계상, 재고자산 과소계상, 매출과소 계상, 조세피난처, 수출가격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항목은 납세윤리 2문항, 납세풍토 2문항, 조세부담의 공평성 2문항, 재정지출의 공정성 2문항, 정부의 재제수준 2문항, 조세의 부담감 정도 2문항, 수출기업 등 업종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설문지 내용분석

| 문항          | 설문내용  |   | 문항수  |
|-------------|---|---|------|
| 1. 인구통계학적항목 | 1. 업종<br>3. 성별<br>5. 업태   | 2. 연령<br>4. 매출액<br>6. 자산총액                            | 6문항  |
| 2. 종속변수항목   | 1. 전표누락<br>3. 무자료거래<br>5. 인건비과대계상<br>7. 매출과소계상<br>9. 수출가격조작             | 2. 사적비용의계상<br>4. 가공경비계상<br>6. 재고자산과소계상<br>8. 조세피난처    | 9문항  |
| 3. 독립변수항목   | 1. 납세윤리(2문항)<br>3. 조세부담의공평성(2문항)<br>5. 정부의 재제수준(2문항)<br>7. 수출기업등업종(3문항) | 2. 납세풍토(2문항)<br>4. 재정지출의공정성(2문항)<br>6. 조세의 부담감정도(2문항) | 15문항 |

### 4. 표본 선정과 분석방법

#### 1) 표본 선정과 구성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전국규모의 선정은 너무 대상 범위가 광범위 하므로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무작위 200명 납세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할 것이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 기법은 t검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총 200부를 배포하여 제조업 25부, 도·소매업 32부, 건설업 11부, 서비스업 21부, 기타 5부로 총 94부를 회수 하였으며 분석에 86부를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독립 변수에 따라 총7개의 가설이 설정되었으며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 변수들의 평균을 이용하였고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 IV. 실증 분석 결과 및 해석

#### 1. 기술적 통계량 분석

1) 응답자의 현황

(1) 업태 및 업종

<표 4-1> 응답자의 업태 및 업종별 분포

| 문 항 | 구 분   | 표 본 수 | 백분율(%) | 비 고 |
|-----|-------|-------|--------|-----|
| 업 태 | 제 조 업 | 17    | 19.8   |     |
|     | 도·소매업 | 32    | 37.2   |     |
|     | 건 설 업 | 11    | 12.8   |     |
|     | 서비스업  | 21    | 24.4   |     |
|     | 기 타   | 5     | 5.8    |     |
| 계   |       | 86    | 100    |     |
| 업 종 | 수출기업  | 25    | 30.2   |     |
|     | 내수기업  | 59    | 63.8   |     |
|     | 기 타   | 1     | 1.2    |     |
| 계   |       | 86    | 100    |     |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2) 연령 및 성별

<표 4-2>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분포

| 문항 | 구분     | 표본수 | 백분율(%) | 비고 |
|----|--------|-----|--------|----|
| 연령 | 20대    | 7   | 8.1    |    |
|    | 30대    | 24  | 27.9   |    |
|    | 40대    | 42  | 48.8   |    |
|    | 50대 이상 | 13  | 15.1   |    |
| 계  |        | 86  | 100    |    |
| 성별 | 남      | 56  | 67.4   |    |
|    | 여      | 28  | 32.6   |    |
| 계  |        | 86  | 100    |    |

(3) 매출액

<표 4-3> 응답자의 기업규모(=매출액)에 따른 분포

| 구분               | 표본수 | 비율(%) |
|------------------|-----|-------|
| 10억 미만           | 49  | 57    |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10  | 11.6  |
| 30억 이상 - 50억 미만  | 6   | 7.0   |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0  | 11.6  |
| 100억 이상          | 11  | 12.8  |
| 합계               | 86  | 100.0 |

2) 기술적 통계량

(1) 독립변수의 기술적 통계량

<표 4-4> 독립변수별 평균값

|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
| 납세윤리 | 86  | 2.42 | 0.49 |
| 납세풍토 | 86  | 2.29 | 0.36 |
| 공평성  | 86  | 1.72 | 0.41 |
| 재정지출 | 86  | 1.59 | 0.48 |
| 제재요인 | 86  | 1.86 | 0.38 |
| 조세부담 | 86  | 1.94 | 0.31 |

<표 4-5> 독립변수의 구성요소

| 연구변수     |              | 변수의 구성 |                |      |
|----------|--------------|--------|----------------|------|
|          |              | 요 인    | 세부항목           | 척 도  |
| 독립<br>변수 | 납세자의<br>조세인식 | 납세윤리   | 설문Ⅱ-11, 설문Ⅱ-12 | 3점척도 |
|          |              | 납세풍토   | 설문Ⅱ-1, 설문Ⅱ-2   | 3점척도 |
|          |              | 공 평 성  | 설문Ⅱ-3, 설문Ⅱ-4   | 3점척도 |
|          |              | 재정지출   | 설문Ⅱ-5, 설문Ⅱ-6   | 3점척도 |
|          |              | 제재요인   | 설문Ⅱ-7, 설문Ⅱ-8   | 3점척도 |
|          |              | 조세부담   | 설문Ⅱ-9, 설문Ⅱ-10  | 3점척도 |

위의 요인들은 기술적 통계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세부항목이 평균 보다 높고 낮음을 토대로 그 집단을 정의 하였다.

(2) 종속변수의 측정

<표 4-6> 종속변수별 평균값

|  | 표 본 수 | 평 균  | 표준편차 |
|--|-------|------|------|
|  | 86    | 2.23 | 0.52 |

<표 4-7> 종속변수의 구성요소

| 연구변수     |                | 변수의 구성  |             |      |
|----------|----------------|---------|-------------|------|
|          |                | 요 인     | 세부항목        | 척 도  |
| 종속<br>변수 | 납세자의<br>조세회피행위 | 조세회피 성향 | 설문Ⅲ-1 ~ Ⅲ-9 | 3점척도 |

위를 9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집단,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조세회피성향이 낮은 집단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상의 변수를 중심으로 각각의 독립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검정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 2. 가설의 검정

### 1) 가설 1의 검정결과

<표 4-8> 가설 1의 t검정 결과표

|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통계량 |      |
|-------------------------------|----|------|------|-------|------|
|                               |    |      |      | t     | p    |
| 납세풍토 높음                       | 49 | 2.14 | 0.51 | 1.43  | 0.16 |
| 납세풍토 낮음                       | 37 | 2.30 | 0.52 |       |      |
| Levene 통계량 = 0.191 p값 = 0.663 |    |      |      |       |      |

Levene 통계량이 0.191 p값이 0.663으로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t값이 1.43, p값이 0.16으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다.

### 2) 가설 2의 검정결과

<표 4-9> 가설 2의 t 검정 결과표

|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통계량 |      |
|-------------------------------|----|------|------|-------|------|
|                               |    |      |      | t     | p    |
| 납세풍토 높음                       | 44 | 2.02 | 0.40 | 4.12  | 0.01 |
| 납세풍토 낮음                       | 42 | 2.45 | 0.54 |       |      |
| Levene 통계량 = 0.164 p값 = 0.686 |    |      |      |       |      |

Levene 통계량이 0.164 p값이 0.686으로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t값이 4.12, p값이 0.01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3) 가설 3의 검정결과

<표 4-10> 가설 3의 t검정 결과표

|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통계량 |      |
|-------------------------------|----|------|------|-------|------|
|                               |    |      |      | t     | p    |
| 공평성 높음                        | 37 | 2.07 | 0.54 | 2.63  | 0.01 |
| 공평성 낮음                        | 49 | 2.35 | 0.41 |       |      |
| Levene 통계량 = 0.191 p값 = 0.663 |    |      |      |       |      |

Levene 통계량이 0.191 p값이 0.663으로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수있으며 t값이 2.63, p값이 0.01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4) 가설 4의 검정결과

<표 4-11> 가설 4의 t검정 결과표

|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통계량 |      |
|-------------------------------|----|------|------|-------|------|
|                               |    |      |      | t     | p    |
| 재정지출의 공정성이 높음                 | 37 | 2.22 | 0.52 | 0.166 | 0.87 |
| 재정지출의 공정성이 낮음                 | 49 | 2.24 | 0.53 |       |      |
| Levene 통계량 = 0.155 p값 = 0.695 |    |      |      |       |      |

Levene 통계량이 0.155 p값이 0.695로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수있으며 t값이 0.166 p값이 0.87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설 5의 검정결과

<표 4-12> 가설 5의 t검정 결과표

|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통계량 |      |
|-------------------------------|----|------|------|-------|------|
|                               |    |      |      | t     | p    |
| 제재수준이 높음                      | 19 | 1.84 | 0.54 | 3.42  | 0.01 |
| 제재수준이 낮음                      | 71 | 2.31 | 0.48 |       |      |
| Levene 통계량 = 0.024 p값 = 0.877 |    |      |      |       |      |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Levene 통계량이 0.024 p값이 0.877로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t값이 3.42, p값이 0.01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6) 가설 6의 검정결과

<표 4-13> 가설 6의 t검정 결과표

|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통계량 |      |
|-------------------------------|----|------|------|-------|------|
|                               |    |      |      | t     | p    |
| 조세부담이 높음                      | 4  | 2.24 | 0.86 | 0.36  | 0.77 |
| 조세부담이 낮음                      | 82 | 2.14 | 0.51 |       |      |
| Levene 통계량 = 2.228 p값 = 0.139 |    |      |      |       |      |

Levene 통계량이 2.228 p값이 0.139로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t값이 0.36, p값이 0.77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가설 7의 검정결과

<표 4-14> 가설 7의 t검정 결과표

|                               | N  | 평 균  | 표준편차 | t 통계량 |      |
|-------------------------------|----|------|------|-------|------|
|                               |    |      |      | t     | p    |
| 수출기업                          | 26 | 2.11 | 0.52 | 3.29  | 0.01 |
| 내수기업                          | 60 | 2.50 | 0.42 |       |      |
| Levene 통계량 = 0.191 p값 = 0.663 |    |      |      |       |      |

Levene 통계량이 0.191 p값이 0.663으로서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등분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t값이 3.29, p값이 0.01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 3. 가설검정 결과의 요약

- 1) 납세윤리 의식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조세회피행위가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도덕적인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과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 성향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 2) 납세풍토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를 위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하여야 하며 모든 소득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 3)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과세당국은 소득간의 동일한 과세확보를 함으로써 세원을 확장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거나 각종 세제감면 등의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 4) 재정지출의 불공평성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결론으로 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지출 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정부의 제재수준에 대한 가설은 채택 되었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제재강화나 세무조사 강화에 순응하기 보다는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 6) 조세의 부담감 정도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현재의 경기불황으로 납세자들에 대하여 소비증가 정책, 소득 확대 정책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7) 수출기업과 내수판매기업의 업종별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정부의 수출기업 우대정책과 수출기업의 수출면장에 의해서 해당 기업의 소득이 거의 노출이 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한 조세회피 요인 파악, 조세회피의 원인이 되는 납세윤리, 납세풍토, 조세부담의 공평성, 재정지출의 공평성, 정부의 제재수준, 조세 부담감, 업종 등의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는 것으

로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납세풍토나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정부의 제재수준, 업종 등의 가설은 유의적으로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과세 당국이 과세기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에 맞게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을 이에 순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문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일부기업에서 해외지점에 수출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 등으로 조세회피를 시도하므로 정부는 전산망의 개선이나 이전가격 세제의 정비 등 과세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윤리, 재정지출의 불공정성, 조세의 부담감 정도의 가설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에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거나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재정정책이나 조세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부담감이 낮은 납세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새로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를 확보할 수가 없었으며, 직접적인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설문지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지 내용이 기업의 민감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응답편의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

셋째, 선정된 7개의 독립변수들이 조세회피성향을 완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어려우며 표본 선정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본대상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설문항목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진황,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유시영,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0).

- 이우환,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1996).
- 이중환,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2).
- 이필우, 조세회피에 관한 행동적 접근, 『1986년도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86, pp. 40-86.
-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0).
- 황원오, 국제적인 조세회피의 유형과 대책, 한국국제재정협회 『조세학술논집』 제4집, 조세통람사 (1987).
- Alligham, M. G.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pp. 328-338.
- Christiansen, V.,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1980, pp. 389-395
- Clotfelter, C. T.,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1983, pp. 363-373.
-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erg,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1978, pp. 107-16.
- Lewis, A., "An Empirical Assessment of Tax mentality", *Public Finance*, Vol. No. 2, 1979, pp. 245-257.
- Song, Y. and Yarbrough, T. E.,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 / Oct., 1978, pp. 442-452
-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Vol. 31, 1976, pp. 295-305
- Spicer, M. W. and L. 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33, 1980, pp. 171-175.
- Srinivasan, T. N., "Tax Evasion :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1973, pp. 339-346.
- Witte, A. D. and D. F.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imeo,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83.
- Yitzhaki, S., "A Note on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84, pp. 201-202.

<ABSTRACT>

## The Determinants of Tax Evasion of Korean Taxpayers

Woong-Soo Jeon \*

Kyung-Il Le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lationships between tax evasion tendency of tax payer and taxpayer characteristics.

The 7 factors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 86 questionnaires are collec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T-test was used to test hypothesis.

We could find some interesting results which was not found in the previous studies.

1. The enterprises producing commodities for domestic markets show lower tax evasion tendency than that of export industry companies.
2. There a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ength of regulations of tax authority and the corporation's tax evasion tendency.
3. There a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budget and the tax evasion tendency of tax payer.

---

\* Professor of Accounting, Dankook University

\* \* Ph D student in accounting, Dankook University